

제2020-1호 (통권 24권)

#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 CONTENTS

<b>권두언</b> .....	05
한국 사회과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김정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b>지상세미나</b>	
“포스트 코로나 :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08
이상환(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 정치외교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11
정재환(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 사회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14
유홍준(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부총장)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던지는 질문, 어떻게 답할 것인가” .....	17
김성열(한국교육학회 회장,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b>남기고 싶은 이야기</b> .....	21
동반성장을 다시 생각한다 정운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b>학회동정</b> .....	24
<b>협의회 소식</b> .....	26
<b>협의회 임원진</b> .....	28



###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사회과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사회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경제성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 대학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저서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성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역사상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로 된 예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하면서 이들 국가의 성장요인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선택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높은 사교육비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앞으로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것이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아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업투자가 감소해 실업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는데 연금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미흡해 노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생활은 윤택해 졌지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심화 그리고 노년층의 빈곤으로 포퓰리즘과 큰 정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을 신봉하고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인 합리적 기대학파가 실업과 양극화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미국의 재계가 사회주의 경향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과 사회보장의 강화 그리고 부자과세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왔다. 한국사회의 제 문제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포용적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계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학제 간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을 저술할 때 경제학은 정치경제학 이었다.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경제현상과 연관된 정치, 사회, 역사 그리고 심리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포함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에 의해 수학과 물리학 등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사용되면서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요인 등은 모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ceteris paribus) 경제적 요인만

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게 되었다. 결국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선택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방법론은 현재 다른 사회과학분야에도 파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의 각 분야들은 자연생태계와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하지 않고는 사회현상의 올바른 원인 분석을 할 수 없으며 제시된 해결방안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사회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시장이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내수가 작고 수출비중이 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은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한국은 외환의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 외에도 국민적 성향에서도 특성이 있다. 한국인은 경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동시에 평등에 대한 의식도 강하다. 이는 1950년 농지의 소유상한을 3정보로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의 이론적 모형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선진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특성이 반영된 이론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 내수시장이 큰 경제구조에 맞는 정책을 수출비중이 높은 경제에 적용했을 때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한국화하여 한국사회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과학이 실천과학이라는 특성도 중요시해야 한다. 사회과학은 사회문제의 현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과학이기 때문에 많은 일반 대중들은 사회과학계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활용되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현실을 분석하기 보다는 수학적 모형을 이용한 이론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모형구축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실천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현실문제 분석이 상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과학계는 최근 들어 국제화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많은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제 컨퍼런스에도 많은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발전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부작용을 국제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연구는 중요하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국제적으로 갈등이 지속될 것이 전망되며 코로나 사태로 사회여건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비대면소비와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실업의 증가와 빈부의 격차 확대 등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반세계화 추세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여건 또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크게 감소되면서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큰 정부와 포퓰리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76년에 설립되어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는 그동안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와 세계사회과학협의회(ISSC) 그리고 국제사회과학기구연맹(IFSSO)의 회원으로서 한국사회과학계를 대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도사회과학협의회(ICSSR)와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맡으면서 15개 회원 학회와 함께 학제 간 연구와 사회과학의 한국화 담론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협의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제20대 박찬욱 회장님 그리고 한정훈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과 김종길 SSK네트워크지원사업 단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지상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 정치, 사회, 교육 분야의 변화와 대응방안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게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뉴스레터

일시 : 2020년 6월

후원 : 한국연구재단, SSK 네트워킹지원사업

주제 : 포스트 코로나 : 정치, 사회, 교육 분야의 변화와 대응방안

1. “포스트 코로나 :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상환(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포스트 코로나 : 정치외교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재환(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3. “포스트 코로나 : 사회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유홍준(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부총장)
4.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던지는 질문, 어떻게 답할 것인가”  
김성열(한국교육학회 회장,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 포스트 코로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상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국제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양상은 유럽에서의 동·서독 분단과 동아시아에서의 남북한 분단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이는 결국 이념대결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그리고 제1세계(북대서양조약기구, 브레튼우즈체제) 대 제2세계(바르샤바조약기구, 코메콘체제)로 대별된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영 내 협력과 가치와 이익을 달리 하는 진영 간 갈등이 과거 냉전의 모습이었다. 그 대결 구도에서 살아남는 길은 진영 속에서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냉전은 무엇을 일컫는가. 신냉전은 탈냉전기 패권경쟁의 산물이고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기 도래 이후 세계는 중국의 급부상을 목격해왔고 중국 위협론과 기회론이라는 상반된 시각에서 이를 전망하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력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길기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가 되었다. 홍콩 민주화운동 사태에 직면한 중국당국의 태도는 서구국가들을 실망 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는 경제발전이 정치적 민주화를 초래한다는 명제가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기 제1세계의 고민은 깊어진다. 중국의 급부상을 기회론이라는 낙관적 사고로 전망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위협론이라는 비판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날기에 충분한 행동을 중국 정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작년 중국이 집단지배체제를 일인지배체제로 바꿨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력은 중국 정치의 퇴행에 실망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사회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사고체계가 다른 힘 있는 중국의 출현은 서구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 유럽의 영국에서 북미의 미국으로의 평화로운 세력전이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양국 간 '가치의 공유(shared values)'가 그 배경이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 가치의 공유가 미약하다면 평화로운 세력전이가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구 냉전과는 사뭇 다르다. 그 당시는 미·소 간 그리고 제 1세계와 제 2세계 간 '이익의 공유(shared interests)'가 미미했다. 지금은 강대국 간 즉 경쟁국가 간 이익의 공유가 적지 않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극단적인 선택을 억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가치 공유 우선 국가들은 중국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훼손을 걱정하며 역학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한다.

가치공유와 이익공유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각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짧게 말하자면, 둘 다 중요하다. 가치공유를 우선하면서 중국을 사고가 다른 위협세력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려는 서구강대국들과 일단 먹고 살기위해 중국의 가치추구가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편승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약소국들 간 대결 구도로 국제사회는 이합집산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구 냉전이 가치·이익 공유집단과 이(異)집단 간의 갈등이었다면, 신 냉전은 가치우선 집단과 이익우선 집단 간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가치공유에 따른 결속력이 일부 강대국을 제외하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냉전 시대에 걸맞은 이념대결은 어떠한 구도인가. 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자본주의(시장자유성 우선) 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 자본주의(국가개입 우선)가 그것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민주주의(다당제, 법치주의) 대 중국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일당지배, 인치주의)가 그 핵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냉전과 다른 양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서구국가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AI, 빅데이터시대에 중국의 기술혁명이 반인권적·반윤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갖게 된 것 때문이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세력의 선택은 중국식 과학기술혁명을 따르거나 아니면 가치추구가 다른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기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크고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서 쉽게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가치구현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표준전쟁(standard war)'이다. 각종 표준설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AI·빅데이터 시대에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금까지의 중국식 기술혁명을 지식재산권 탈취라는 범죄 행위로 폄하하면서 중국정부의 민주주의 질서 위협 등을 비판해 왔다. 미국은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거론하며 중국에 자유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21세기에 재편된 냉전 체제의 도래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한편 과학기술전쟁을 통해 국가경쟁력 다툼을 경주하고 있고, 다른 한편 표준전쟁을 통해 국가이념 경쟁을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된 국제경제 관계 속에서 피아구분이 어렵고 진영구분이 애매하다보니 가치공유 우선이나 이익공유 우선이나 하는 경쟁 구도도 희석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이 경쟁을 해나가며 누가 패권국가가 되느냐가 그 관건인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금 '코로나 책임론'을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가치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는 친미 경제 블록 구상이고 동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생산 기지를 무력화하며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중국의 '기술굴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그 결과 애플사 등 중국에 간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reshoring, 본국 회귀)을 단행하려 하고 안되면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 국가로 이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자본의 회수라는 '탈월가'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미·중 간 새로운 냉전 시대를 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디지털화(Digitization)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제 감염병이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글로벌 생산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80%가 탈중국을 계획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대면 경제 확산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융서비스산업의 핀테크화와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패권을 추구하던 중국에게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지금의 경쟁이 격화되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다. 패권전쟁 결과 중국이 미국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서 밀려나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과학기술 전쟁과 표준 전쟁이 뒤섞인 가운데 세계는 냉전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모른다. 예를 들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중국이 '화웨이 지지국'을 규합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과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이 총성 없는 전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 ‘어느 편이냐’를 묻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세계 각국이 줄 서기에 나서면서 구 냉전기의 ‘철의 장막’에 버금가는 ‘디지털 철의 장막(digital iron curtain)’이 전세계에 드리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G20 속의 G2 시대 혹은 다극 속의 양극체제라고 규정한다. 국제사회는 1990년 냉전 종식과 더불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경험해왔고, 2020년 코로나19는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아직은 미국과 중국 간 불균형적인 양극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보다 균형적인 양극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다 사려깊은 대비가 필요하다. 미·중 간 균형적인 양극체제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 편향된 외교적 스탠스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우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익의 공유보다는 가치의 공유가 우선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우방인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지혜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2020년은 한국 외교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외교독트린을 만들어 발표할 시점이다. 우리는 5년을 단위로 대북정책과 외교노선이 흔들린다. 한 나라의 독트린이 자리잡으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 20년 동안 안 바뀔 독트린이 나오려면 정파적 이익을 떠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외교안보딜레마 상황에서 우리의 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2020 외교 독트린’을 통해 남·북방 삼각관계 구도를 뛰어넘은 외교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포스트 코로나: 정치외교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19(COVID-19)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를 전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유행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른바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할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정치학계의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중국에 한정된 유행병(epidemic)으로 발현하여 전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의 급속한 진행은 코로나19가 가지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구조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통합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재화와 자본뿐만 아니라 인간의 국제적 이동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세계화는 지역적 유행병을 세계적 유행병으로 전환시킨 구조적 환경으로 작동하였다.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는 국제적 교류 없이 국가가 생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요한 것은 세계화와 유행병의 확산 방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국제적 교류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경 통제의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염병에 대하여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TO가 규정한 국제무역규범의 경우에는 '필수적 국가안보 예외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안보(security)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닌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국제적 교류를 제한하는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세계화 시대 전염병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국제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 세계적인 보건 안보의 증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통제를 한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염병 발생 시 국가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긴급한 보건의료의 위기를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내 1차적인 판단의 권한과 범위를 부여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각 국가별로 상이한 대응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판단 권한의 주체가 상이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전염병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심의(deliberation) 과정이 요구된다. 이같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전염병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신속성과 심의과정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전염병 발생 시 국가의 사회적 통제와 강도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정당한 통제 범위와 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는 국가의 통제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국가가 대응할 것이라는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야기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의 문제 역시 앞으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교류가 거의 중단되어 향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향후 도래할 세계적 경제위기는 각 국가의 대외정책을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브렉시트(Brexit) 등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보호주의적 흐름이 등장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경제위기는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 흐름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각 국가들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하여 근린공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을 펼칠 경우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흐름에 의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보호주의적 흐름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호주의적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었지만 2008년 위기가 세계화의 흐름을 급격하게 전환시키지는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2008년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적 최종대부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 둘째는 G-20를 통해서 일정정도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친 정책에 기초하여 판단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정책은 세계경제의 안정성이라는 국제적 목표보다는 국내적 목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2008년 위기 이후에 보여주었던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이번 사태의 해결구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논쟁이 양국 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국내적 목표에 집중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G20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세계경제 교류의 축소로 수출산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고, 사회적 교류의 축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파생된 경제적 하락 또는 붕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난지원금의 논쟁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 역할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 시에 국가의 선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 시에 강화된 국가의 역할이 임시적인 성격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정책에 그칠 것인지,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증대하였지만 이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적인 성격에 머물렀고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할 국가의 역할 변화가 임시적인 성격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성격이 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과 변화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가 정치학계에 던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정치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유 홍 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부총장

2020년 6월 10일자로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누적 확진자가 740만 명을 넘어섰고, 4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이 확진자 1위로 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2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확진자가 증가하고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진자가 1만2천명을 넘었지만 하루 증가는 두 자리 수준이고 사망률은 2.4%로 세계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 1. 논의의 전제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사회학적으로 진단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전제를 미리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학은 미래 예측을 하는 미래학과 달리 현실사회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그 동안 사회학에서 발전되어온 사회변동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선형 진화론이나 수렴론에 비해서 다원론이 세계사적 사회변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즉 기술발전이 추동한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이건 자연재해가 초래한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이건 간에 사회변동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선택과 정책결정이었기 때문에 소셜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사람(인간, 개인)은 경제학에서 '경제인(economic man)'으로 파악하는 원자화된 행위주체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회학의 전제이다. 즉 사람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로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점에서, 사회변동 역시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관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 즉 세계화 이슈와 연관되기도 한다.

## 2. 변화의 양상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충격과 변화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중단과 위축, 국가 간 여행 금지, 집단적 모임 감소, 소비활동 위축, 실업 증가(예로, 4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47만 명 감소, 일시휴직은 113만 명 증가), 개인 자유의 제한과 공권력 증대, 온라인 수업 확산, 비대면 마케팅 증가 등이다.

지난 4월 갤럽 인터내셔널은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시민 총 17,7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겪은 변화와 관련 인식 및 이후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인들은 Covid-19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데 41%가 동의한 반면에 이전과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데 46%가 동의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변화론 46%는 같은 수준이지만 회귀론이 50%로 세계 평균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한국인은 마스크 착용에 94%, 손 자주 씻기에 92%, 사회적 거리 두기에 85%가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모두 세계 평균 이상이고 특히 마스크 착용은 세계 1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이 한국인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유의 ‘다른 사람 눈치 보기’ 경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그간 몇몇 국내 조사결과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다수의 한국인들은 코로나19 확진시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는 낙인찍히기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은 인식과 가치, 삶의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집단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인권 이슈가 대두되기도 했다.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국민 다수의 높은 공공의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공헌의 가치관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젊은 세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출산을 지연하는 양상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일과 생활의 재편, 소득과 소비의 재조정을 국민 모두가 겪고 있다.

### 3. 듀얼 뉴노멀(Dual New Normal)과 비대면 이슈

현재의 이와 같은 상황은, 서머스(Summers)가 저성장이 일상화된 경제적 장기 침체를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로 규정한 ‘뉴노멀(New Normal)’이 일상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구화된 팬데믹 위험과 불확실성이 뉴노멀로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히 ‘Dual New Normal Society’라고 할만하다.

#### 교육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접촉 강화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 중 하나는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확대되어 정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수업은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트렌드이다. 이는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의 급부상 및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학습격차의 문제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수업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 수업의 질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교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업의 모든 내용이 수업시간 종료와 더불어 시공간에서 사라지는 강의실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저장되어서 오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하면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확대된다고 할 경우, 우리는 개인주의와 집단의 협력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제도와 의식 혁신이 과제로 부각된다.

#### 재택근무

지금까지 재택근무는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만 활용되어 왔다. 80년대 정보화사회론의 등장 이후 IT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하게 재택근무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직 프리랜서 등 제한된 업종에서만 이것이 활용되었고 핵심인력은 여전히 오피스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의 팬데믹을 통해 다수의 근로자들이 강요된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 고용주, 사회일반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동시에 끼친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 출퇴근시간 경감, 불필요한 회의시간 절약, 오피스 스트레스 탈피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용주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나 설비, 관리비 등 비용절감 유인이 있지만 시공간의 재해석이 필요하고 생산성 이슈를 고민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교통량의 변화, 직장 주변 요식업 쇠퇴, 오피스 공실 증가 등의 변화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AI 기반 노동력 감소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스마트공장 등 무인화가 가속되고 있던 중이어서 앞으로 신규고용 축소, 구조조정, 아웃소싱 가속 등 노동시장 변혁은 상당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정과 작업장이 분리되어 왔던 세계사적 추세에서 다시 가정과 일터가 통합되는 상황으로 변화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계 단절의 두려움, 승진에서의 소외 우려 등을 호소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확산여부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 사회적 분열 이슈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 4. 위기 속의 사회적 관계 이슈

코로나19 팬데믹은 ‘초연결’ 상황에서의 위기이며 지구화된 위험 사회로 대변된다. 위기상황에서 불안이 확산되며 각자도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인간은 ‘경제인’ 개념에서 비취지는 것처럼 ‘별로 사회화되지 않은(under-socialized)’ 완전히 개인주의적 존재가 아니지만, 한편으로 파슨즈(Parsons)의 시스템 이론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과도하게 사회화된(over-socialized)’ 존재도 역시 아니다. 즉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은 이 둘 사이의 중간적인 성향을 띄게 마련인데,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존과 이익추구가 더 강하게 우선시 될 가능성을 높인다.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회적 존재인 대부분의 개인은 남의 눈총을 받을만한 행위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 같이 친밀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자기이익 추구의 행위가 억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고 위험이 증폭되면, 평소에 점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던 사람조차도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화를 통해 잠재되었던 인간의 본성이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예는, 재난영화들에 예외 없이 꼭 등장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보이는 행태나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던 사재기 소동 등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팬데믹이 당분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여년 전 외환위기가 초래한 IMF관리체제 아래서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수많은 범죄와 일탈의 증가 상황을 이번에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던지는 질문, 어떻게 답할 것인가



김성열

한국교육학회 회장,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 (I)

전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을 상당 부분 바꿔 놓고 있다. 빅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형편이 닿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에 호응하여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협력하여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거나 취소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계절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다.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와 대학의 교육활동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모습이 그렇듯이 많이 변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실제 등교 전까지는 온라인 강의가 교실 수업을 대신하였다. 현재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밀집과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이번 학기 내내 실습·실습·실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었고, 가보지 않는 길이었다. 온라인 교육의 실시 초기에는 많은 초·중

등학교 교사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다. 학교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안정화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19 상황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양상을 돌아보고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짧은 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한정하여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네 개의 질문과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 (II)

II-1.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초·중등학교의 온라인 교육 방식은 다양하다.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형이나 과제 제시형도 있고, 실시간 강의형도 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 중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콘텐츠 제공형이나 과제제시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전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시간 강의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약화시킨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교육은 어떤 가능성을 안고

있는가? 그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보여준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학교교육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온라인 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이나 방송 등 통신 기기만 연결하면 학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맥아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교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교실을 뛰어 넘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경험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혼합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가지 방식을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교육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들끼리 직접 만남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과 실천적 경험이 상호존중과 배려, 협력과 같은 덕목이나 정서 등을 기르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지식 교육의 경우에는 지식의 종류와 위계 등을 고려하여 제대로 수업 설계를 한다면 온라인 교육이 교실교육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교육으로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달 방식인 콘텐츠 제공형이나 과제 제시형에 머무르지 말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교실교육에서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상호작용 없는 교육은 진정으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래 교사가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며, 학생이 이해했다고 할 때까지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학습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질문할 기회를 준다. 교육은 학생이 가르침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이루어질 때 교실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 단순히 학교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11-2.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교육으로서 가능성에 대하여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언론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의 온라인 교육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우리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진실의 순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ICT 기반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강조만 했지 실제로는 기기나 디지털 자료의 보급 등의 여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역량이나 디지털 기기와 자료 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데 소홀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ICT를 활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이기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는가? 이번 코로나 상황이 한국교육에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기 접근성과 교사들의 온라인 교육역량의 측면에서 가능하다. 먼저, IT 강국이라는 평판이 무색하게 이번 코로나 19 상황은 온라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의 보급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OECD의 PISA 2018년 데이터에 의하면, '사용할 데스크 탑 컴퓨터가 집에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69%, '사용할 노트북이 집에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3.35%였다. 이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이 완전히 중복된다고 가정하더라도, 4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집에서는 온라인 교육에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C나 노트북만이 아니라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까지 포함시켜도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그러한 기기가 없는 학생이 지난 4월 7일 기준 26만7000여명으로 조사됐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4%에 해당한다.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휴대폰만으로는 온라인 교육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은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온라인 교육이 교실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은 모든 학생들이 기기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교원연수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60% 남짓한 현직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2018 PISA 데이터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수업 중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여러 교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과학 교과의 경우에도 그 응답 비율이 44.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디지털 기기나 자료 활용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현직 교사의 온라인 교육 역량과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예비교사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게임 등 놀이만이 아니라 학습을 위하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3.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종 교육의 이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어우러지고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기기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번 재난 교육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압축된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교사들이 이번에 온라인 수업경험을 통하여 수업에서 ICT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육부 등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한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이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들이 ICT 활용 수업능력,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과 학급 경영,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구축해 가야 한다. 여기에 창의적인 민간 기업의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이 이 일을 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 활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1-4.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 간·학교 간·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이 질문은 평상시에는 중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학교교육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교육격차 해소는 언제나 중요하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의 출발은 미시적 수준의 교육격차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역 간·학교 간 격차는 차치(且置)하자. 학생 간 교육격차는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원 정도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경험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교육 경험의 질이 높으면 불리한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습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수록, 가정배경의 차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공백으로 교육이 가정에 맡겨지는 시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학습에 작용하는 학교 교육의 긍정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정의 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습격차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은 학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 수업 및 학습 상황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보다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입 노력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등교 전에 실시된 온라인 교육은 장애 등의 이유로 온라인 기기에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 가정에서의 온라인 교육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나 편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학습 공백까지 메우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 당국이 온라인 학습 자원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 여부 및 성과까지 균등하게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간의 격차를 단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계층이나 가정배경, 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은 오프라인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간에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온라인교육이 교실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학교교육보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 줄 때 온라인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으로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학교나 교사들은 개별 맞춤형교육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소외지역 및 취약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학습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Ⅲ)

이번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 학교교육에 분명 위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분명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위기였다.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과 상호 작용, 학생 들끼리 학교에서의 만남과 상호교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만남과 교류, 상호작용을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등 교육의 방식에 대하여 어느 한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 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우호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상황을 온라인 교육이 이상적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학생 누구에게나 평등한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갖추게 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학습자 특성에 특화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전보다 진화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도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습 자료의 축적과 장애·기초학력 부족 등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과 기반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산에는 창의적인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사들의 온라인 교육 및 디지털 기기와 자료 활용 역량은 물론 학생들의 온라인 및 디지털 학습역량도 함양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IT강국에 걸맞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나가야 할 때다.

# 동반성장을 다시 생각한다



정운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의 일상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초록잔디와 푸른 하늘은 있지만 관중이 없는 야구장에서 펼쳐는 야구처럼 말이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성장은 부진일로를 걸을 것이고 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은 김영삼 정부 6%대에서,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로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마치 법칙처럼 하락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지도 모른다.

분배상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를, 소득 상위 10%가 47%를 차지했다. 앞으로 매월 교박교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소득과,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성장과 양극화는 새로운 일상이 되고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번 기회에 '동반성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 1.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특징짓는 중심적인 작동원리가 있다. 사회 작동 원리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을 비롯하여 정책·제도·

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는 아담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국부론』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돼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경제와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 현려·정의·인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의'의 덕과 '인혜(仁惠)'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가 독점,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인혜의 덕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정의는 경제사회의 기둥이며 인혜는 그 지붕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붕이 부실하면 세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위협받는다. 그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 과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정의와 인혜에 기초한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 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조정과 통제) 원리가 하나의 토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는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즈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사회 작동 원리 가운데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 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 만을 강조했다 때문이다. 분명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태동을 가져왔다. 그리고 조세프 슈메터의 지적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적 기업가의 끊임없는 출현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 의 덕목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경쟁' 만이 남은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물화(物化)' 된 존재일 뿐이고, 공동체 사회는 물질적 욕망 실현의 장소와 대상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1대 99의 양극화였다.

바로 여기에 동반성장이 필요하게 된다.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달리 개개인을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하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동반성장은 이타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그것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법·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하는 동반성장 사회로 갈 것이다. 따라서 '동반성장' 은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한 정책이나 제도만을 의미하는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제도의 결과가 축적

되어 형성된 어떤 특정한 공동체 사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란 것으로 공동체 사회 구성원인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 기준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가치이며, 사회의 작동원리다.

## 2.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동반성장' 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함께 나누자' 라는 것은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료는 조금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50 빈자에게 50이 분배되었다고 하자.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어 110으로 키워도 분배는 기존의 55 대 55에서 54 대 56 또는 53 대 57 등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와 빈자 모두 성장의 과실을 더 얻지만 빈자의 증분(增分)이 부자의 증분(增分)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이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근로자들과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기업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들에게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뿐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나는 동반성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상대방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이득임을 보여주는 게임이론의 죄수 딜레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류사와 경제분야의 많은 연구는 무한경쟁보다 협력할 때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 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는 함께 협력하여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식'이다. 그것이 공동체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고 서민가계의 불안을 극복하는 경제 제도약의 대안이다.

### 3. 동반성장의 원리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 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 효과를 낳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 학회동정

### 한국경제학회

#### 〈3개 학회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13:00~17: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2020년도 경제경영 5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 주제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과 향후 정책과제
-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5:00~18:0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한국교육학회

#### 〈2020 연차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광복 75년 · 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
-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 2020년 6월 20일(토)
- 장소 : 성균관대학교
- 방식 : Webinar(Web+Seminar)

### 한국국제정치학회

#### 〈2020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특별세미나〉

- 주제 : 코로나 이후 동북아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
-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 장소 : 전략문화연구센터(Virtual Conference)

#### 〈2020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특별학술회의〉

- 주제 : 4·15 총선과 선거제도
-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 장소 : 롯데시티호텔(명동)

#### 〈2020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 주제 : 코로나19와 국제질서의 변화
- 일시 : 2020년 7월 1일~3일(수~금)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신임학회장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취임〉

- 일시 : 2020년 1월 1일

#### 〈한국사회복지학회 신규홈페이지 오픈〉

- 일시 : 2020년 4월 1일

#### 〈제1차 연구방법론 워크숍 진행〉

- 일시 : 2020년 5월 16일

#### 〈제2차 연구방법론 워크숍 진행〉

- 일시 : 2020년 6월 27일

## 한국언론학회

### 〈청년과 2020총선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14:30~17:00
-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관 : 한국언론학회 〈2020 총선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 〈연합뉴스 창사 40주년 기념 세미나〉

- 주제 : 뉴스통신사의 역할과 미래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15:00~17:00
- 장소 : 연합뉴스 연우홀

### 〈한국언론학회 · SKT 세미나〉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와 ICT의 역할
-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4:3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한국언론학회,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11:30~13: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 〈한국언론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세미나〉

- 일시 : 2020년 7월 8일(수) 14:3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국회미래연구원 특별기획세미나〉

- 주제 :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소 : 국회방송
- 방영일시 : 2020년 4월 27일(월), 15:00~17:00

###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 주제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10:00~18:10
- 장소 : 한국학술연구원 B1 회의실

## 한국행정학회

### 〈2020 한국행정학회 · 한국공공선택학회 공동기획세미나〉

- 주제 : 선거법 개정과 한국사회의 미래
- 주최 :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
- 후원 : 국회미래연구원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4: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한국행정학회 한국조경학회 업무협약식〉

- 일시 : 2020년 4월 27일(월)
- 장소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

###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 주제 :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주최/주관 :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한국행정학회
- 후원 : 수원시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14:00~18:00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301호

### 〈2020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 주제 : 포용사회,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행정책임(1)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27일(토)
- 장소 : 강릉(스카이베이호텔)

# 협의회 소식



## 협의회 활동

### (1) 일반

- 2019년 11월 29일 서울대 호암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제21대 회장으로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를 선임함
- 2020년 1월 21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인문사회분야 주요단체장 간담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개진함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2020년 3월 3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 협의회 현황보고서를 제출함
- 2020년 3월 4일 한국심리학회 “2028년 세계심리학대회” 주최계획에 대해 협의회 지지서한을 보냄
- 2020년 3월 12일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응모관련 사항을 회원학회에 공지함
- 2020년 4월 2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재인증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8개 학회에서 의견을 내어 연구재단에 제출하고 연구재단의 답변을 받아 회원학회에 전달함
- 2020년 4월 7일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와 교신하여 신임 회장 및 임원명단을 알려줌
- 2020년 4월 30일 SSK 네트워크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성과 연차보고서와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2020년 6월 23일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인문사회분야 주요단체장 영상회의 참가
- 2020년 6월 23일 코로나 19사태로 5월 이사간담회를 열지 못해 임원진 명단과 협의회 상반기 활동 상황을 서면으로 송부함

### (2) 국제협력

- 2020년 3월 10일 인도사회과학협의회(ICSSR)와 MOU를 체결함
- 2020년 6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014-2019년) 각 1부씩을 요청해서 송부하였고, 14개 단체와 국제자료교환용으로 총 17부를 2020년 발간 저널부터 송부해 주기를 요청해서 송부함
- 2020년 6월 10일 중국사회과학원(CASS)에서 발간하는 중국어 저널 “국외 사회과학”에 수록할 논문요청이 와서 한국경제학회에서 추천한 논문 1편을 보냄, 허정(서강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경제적 성과: 한국의 제조사업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2020년 6월 15일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와 교신하여 본 협의회 로고와 협의회 소개 그리고 신임 회장 및 임원명단을 알려줌



## 학술 활동

2020년 6월 1일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47, no.1 발간 및 배포

2020년 6월 23일 “포스트 코로나 : 정치, 사회, 교육 분야의 변화와 대응방안”, 지상세미나 개최

1. “포스트 코로나 :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상환(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포스트 코로나 : 정치외교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재환(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3. “포스트 코로나 : 사회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유홍준(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부총장)
4.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던지는 질문, 어떻게 답할 것인가”  
김성열(한국교육학회 회장,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 이 지상세미나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3A3079108)

2020년 6월 30일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협의회 임원진

###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전)한국경제학회 회장
부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현)한국교육학회 회장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차기 한국심리학회 회장
	배공찬	국립외교원 정치학	
감사	한광석	부산대 경제학	

###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홍 순 만	연세대 행정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안 재 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위원장
	김 성 은	세종대 경제학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송 영 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김 광 환	연세대 경제학	국장
	주 민 지		간사

##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이 명 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국제개발협력학회	권 혁 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이 용 우	前 국토연구원
한국경영학회	이 영 면	동국대 경영학과
한국경제학회	이 인 호	서울대 경제학부
한국교육학회	김 성 열	경남대 교육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이 상 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한국문화인류학회	임 경 택	전남대 고고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강 철 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학회	유 흥 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한국심리학회	조 현 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한국언론학회	김 춘 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한국여성학회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정치학회	윤 성 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한국행정학회	이 원 희	한경대 행정학과

#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김정식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20년 6월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mailto: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http://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mailto: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http://www.kossrec.org)